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7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19일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결혼하러 왔는가 다문화 여성들 이혼하러 왔는가

광주, 다문화 가구 이혼율 급증…이혼 증가율이 혼인 증가율 넘어서
결혼해 한국국적 취득 후 이혼…자국 출신 남자와 가정 꾸려 생활도

2023 호남통계청 자료

광주지역 다문화 가구의 이혼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 혼인 증가율까지 추월하면서, 다문화 가구의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더불어 사는 사회,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에 따르면 호남지역 다문화 혼인 건 수는 2023년 기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광주 다문화 혼인 건 수는 2023년 기준 475건으로 전년(355건) 대비 33.8%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울산(43.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남 다문화 혼인 건 수도 654건에서 782건으로, 19.6% 늘었다.

2023년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다문화 혼인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펜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지방 인구 고령화와 정부의 다문화 가구 지원책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다문화 혼인이 증가한 만큼 서로 다른 성장 환경으로 인한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이혼 건 수 역시 급등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23년 광주 다문화 이혼 건 수는 206건으로 전년(144건)보다 43.1%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이혼 증가율이 혼인 증가율을 9.3%포인트(p) 넘어섰다. 전남의 다문화 이혼 건 수도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과거와 다르게 광주 등지에서 다문화 이혼 증가율이 혼인 증가율을 추월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가구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을 거듭하는 최근 사회이슈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한국국적 취득 후 가정폭력 등 이유로 이혼하고, 기존 자국 출신 남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국적 여성의 이혼 건수가 1215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반면 한국 여성(대부분 전 베트남 국적 추정)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도 7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일관된 데이터가 도출되는 것은 지난 10여년간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베트남 여성이 혼인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자국민과 재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한국인과 혼인 후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혼인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다문화 가구 수와 전체 가구에서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 다문화 가구 수는 2019년 7347가구, 2021년 8095가구, 2023년 8700가구 등이며, 같은 기간 전남도 역시 1만 4069가구에서 1만 6325가구로 늘었다. 특히 광주는 최근 5년간 전체 가구 대비 다문화 가구 증가율이 18.4%로 전국(17.5%) 평균보다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의 비중도 2023년 기준 광주와 전남이 각각 1.4%, 2.0%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호남지역 다문화 가구 비중을 시·군·구별로 보면 영암이 3.8%로 가장 높았고, 장수(3.0%), 장성·순창·진안(2.9%)이 뒤를 이었다.

광주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광산구(2.2%)의 다문화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북구(1.2%), 남구(1.1%), 서구(0.9%), 동구(0.8%) 순으로 조사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민감국가' 효력 발생…한·미 협력 차질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15일(현지시간) 발생하면서 과학기술계는 혹여 있을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과기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협력을 진행할 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새로운 협력을 진행하려 할 때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행 광주 기아차 방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자동차산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정부, 12조 추경안 마련…민주 "15조까지 증액"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의결할 듯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정부가 당초 발표한 10조원보다 2조원 늘어난 액수를 편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가축전염병·일손 부족에 농민들 속 탄다 ▶6면
KIA 시련의 봄 '긴 호흡'으로 달린다 ▶18면
일하는 청년 빛나는 미래 - 인디제이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www.gwangju.go.kr
내일이 빛나는 도시, 광주